광주 서구청장 재선 볼만한 싸움 된다

민주 김선옥 후보 확정… 非민주 단일후보는 5일 결정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민주당 후보로 김선옥 전 광주시의원〈사진〉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는 민주당 김선옥 후보와 오는 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비 민주 야4당 단일후보, 무소속 후보군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일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결과 1위를 차지한 김선옥 예비후보(전 광주시의원)를 서구청장 재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당원 1400명과 시민 1400명 등 총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7.68%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송갑석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29.58%), 조용진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22.35%), 박혜자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10.40%) 순이었다. 여기에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 가산점을 부여한 결과 김 후보가 45.22%, 박 후보가 12.48%를 기록했지만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로 나섰다가 무소속 전주언 전 서구청장에게 패한 김 후보는 한번의 선거를 치른 탓에 당원과 시민 여론조사에서 골고루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젊음과 개혁 인물'을 내세우고 바닥 민심을 다져왔던 송갑석 후보는 김 후보의 높은 인지도 벽을 넘지 못하고 석패했다. 조용진 후보도 뒤늦게 경선에 뛰어들었지만, 20%를 넘는 지지도를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를 서구청장 재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함으로써 본격 선거체비를 갖출 예정이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비 민주 야4당도 지난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비민주 단일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맞서 선전한 적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에서도 단일후보의 성과를 크게 기대하며 후보 단일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민참여당은 서대석 후보가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밭을 누비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강기수 후보도 출마를 선언하고 후보 단일화 준비를 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단독 후보로 등록한 류상근(서구 장애인자립센터) 서구당원협의회 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울 예정이다. 창조한국당은 아직까지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오는 5일까지 단일후보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여론조사 이외의 단일화 방식 등에 대한 논의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내일 전당대회 '빅3' 초박빙

상호비방 등 막판 신경전 최고조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10·3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일 유력 당권 후보인 이른바 '빅3'간 신경전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1위(당 대표)를 차지하기 위한 선두권의 순위 경쟁이 초접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후보자 간 신경전이 상호 비방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세균 후보 측과 대립각을 세웠던 쇄신연대는 1일 국회에서 "70년대 막걸리 선거가 재현되고 있다"며 정 후보 지지자가 대의원 7명에게 머루주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공세를 폈다.

정 후보측은 이에 "대꾸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아무리 당내 선거라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는데 쇄신연대의 행태는 이미 그 선을 넘은 해당 행위"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쇄신연대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대가 끝난 이후에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선거대책위 소속 우제창·김부겸·정장선 의원 등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세균 후보 측은 짝퉁 줄 세우기를 당장 그만둬라"라고 맹공을 쏟았다.

우 의원은 "정치적 기반이 약한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앞세워 이른바 '세몰이'를 강행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이나 하던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손학규 정동영 후보 측은 일부 지역위원장들의 정세균 후보 지지 선언을 문제로 삼았다. 정 후보 측은 "선언에 포함된 일부 지역위원장은 명의가 도용됐다는 말이 있다"고, 손 후보 측은 "지역에서는 지지 선언에 자발적으로 이름을 올리면 얼마를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날부터 진행되는 당원 여론조사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정동영 후보 측은 "직전 대표였던 정세균 후보는 당비당원 명부를 갖고 지겨울 정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왜 다른 후보에게는 유권자 명부를 공개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손 후보 측은 "영남과 강원 지역 지지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대하라고 하고 있다"며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손 후보의 1위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후보 측은 "당원 명부 비공개는 선관위 방침"이라고 반박하면서 "당원 여론조사가 전체 성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고 반격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는 3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며, 대의원 현장 투표 70%와 당원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金·盧 대통령 기념사업회 창립

1일 광주YMCA무진관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회' 창립대회에서 지선스님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SSM 규제·中企 상생 조기처리 합의

정부-민주당 첫 정책협의회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계 장관과 당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용섭 의원이 밝혔다.

이날 '야(野)-정(政) 협의'에서는 또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조기 처리키로 합의했다. 노인복지 차원의 경로당 지원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율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또 쌀값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대북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배추가격 안정 대책을 조기 마련해 발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정부는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 처리와 관련, 민주당 측은 국회에서 관련 특위를 조기에 구성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뒤 예산안을 심의하자고 요구했으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공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측은 내달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집시법 개정안 조기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측은 개정 집시법이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데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를 들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당정협의가 아니라서 향후 협의 날짜를 잡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 만나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윤수 전남대 총장, 국가과학기술위원 위촉

김윤수 전남대 총장이 연간 14조원이 넘는 국가연구개발(R&D) 예산배분 및 조정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총장은 1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원으로 위촉장을 수여받고,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했다.

그동안 대통령 직속 비상설 자문기구였던 국과위는 1일 독립 상설 행정위원회로 전환되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김 총장을 비롯해 13명이 민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임기는 10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귀남 법무, 전남 검찰지청 순방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일 전남 지역 검찰지청을 차례로 방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와 순천교도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또 오후에는 장흥과 해남의 교도소 및 검찰지청을 방문했으며, 2일엔 모교인 장흥 대덕중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특별강연을 한다. /최경호기자 choice@

시 설

'천정부지' 서민물가 근본 처방 서둘러야

광주지역의 9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전달보다 1.1%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4년 3월의 1.2% 상승 이후 7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이 같은 물가 불안은 신선식품의 폭발적인 오름세에서 비롯됐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은 4월부터 10% 안팎의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6월 13.5%, 7월 16.1%, 8월 20.0%에 이어 9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45.5%로 치솟으면서 4개월 연속 급등했다.

채소값 파동은 기상 악화에 따라 수확량이 반 토막나는 등 공급 부족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식당가에서는 김치나 야채가 자취를 감춘 지 이미 오래다. '김장 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부랴부랴 가격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중국산 배추 100t과 무 50t을 수입하고 이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채소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늑장 대응한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서민들의 대책을 강조하는 정부가 말뿐이지 행동은 따로라는 게 입증된 셈이다.

채소는 서민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어 폭등세가 이어지면 서민 가계의 고통은 그만큼 더 커진다. 특히 지금과 같이 사실상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답 대책'으론 가격의 '널뛰기' 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농수산물값 폭등을 막기 위해 이상기후를 견뎌낼 신품종을 개발해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장기 저장능력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처방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통해 중간 유통상들의 농간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광주 도시재생사업 '인구 유입'이 관건이다

광주시가 민선 5기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기도 전에 용역부터 대거 발주해 구태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최근 1억 2200만원 예산으로 '도심재생 시범사업 발굴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며 광주시도 5000만원을 들여 '충장로 창조적 도심재생 용역'을 의뢰했다고 한다.

시는 또 4억원의 예산으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재생 관련 용역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미 지난해 7억4800여만원의 예산으로 '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을 발주한 상태다. 이 용역은 상업 및 주거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 방식과 구역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용역과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주거지역은 외면한 채 상업지역에만 치중되는 것도 문제다. 이들 용역의 주요 범위는 쇠락하고 있는 구도심, 특히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로 비슷하다.

결과적으로 광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실익이 없는데다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도시재생은 구도심에 대한 소외정책 등으로 인해 인구가 유출되고, 빈 사무실과 건물이 양산되고 있는 구도심 일대를 되살리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구도심은 인구가 여전히 줄고 있으며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구도심의 주거지역을 민간 투자에만 맡기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구도심의 몰락은 불 보듯 뻔하다. 인구 유인책만이 도시재생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30일~11월5일 금강산서 남북 이산가족상봉 확정

북측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6박7일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에서 개최된다.

남북은 1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간 제3차 실무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남북 이산가족상봉은 지난해 9월26일~10월1일 이후 13개월여 만에 처음이며, 2000년 이후 18번째다.

상봉일자는 남북이 지난 17일 1차 실무접촉에서 10월21~27일에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상봉 장소문제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일정보다 늦춰졌다.

상봉 규모는 우리 측이 확대를 요구했지만, 북측의 반대로 기존 규모인 남북 각각 100가족씩 실시하기로 했다.

북측은 이날 접촉에서 이번 상봉만큼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실시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한 금강산관광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접촉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했다.

지난달 24일 2차 실무접촉에서 우리 측이 상봉장소로 면회소를 주장한 데 대해 면회소에서 상봉을 하려면 몰수·동결조치가 풀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데서 북측이 한발 물러선 셈이다.

금강산관광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접촉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은 추후에 북측이 제기하면 관계 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북측 방문단의 남측 가족 상봉은 10월30일~11월1일, 남측 방문단의 북측 가족 상봉은 11월3일~5일 각각 이뤄진다. 또 단체상봉은 이산가족면회소에서, 개별상봉은 금강산호텔에서 열린다.

남북은 오는 5일 각 200명의 이산가족 생사확인의뢰서를, 8일 생사확인의뢰서에 대한 회보서를, 20일 상봉 최종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상봉 시작 5일 전에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선발대가 금강산 현지에 파견된다. 남북은 또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26~27일 개성에서 적십자 본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적십자 본회담에서 남측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북측은 인도주의 사업 확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한편 짜고치는 고스톱(?) 같기도…

올해 나라빚 400조4000억원

작년말보다 40조8000억원 ⬆

국민부담 적자성채무 200조원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40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5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2014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34.7% 수준인 400조4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이중 중앙정부 채무는 381조4000억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19조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 359조6000억원(GDP 대비 33.8%)과 비교하면 40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GDP 비중도 0.9%포인트 늘었다. 다만 지난해 수립한 올해 예산의 407조2000억원(GDP 대비 36.1%)보다는 6조8000억원(1.4%포인트) 감소한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13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지방정부순채무는 6조4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국가채무의 구성을 보면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채무는 200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50%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50%대에 올라섰다. 적자성채무 비중은 내년 50.6%, 2012년 50.5% 등을 기록하고서 2013년 49.9%, 2014년 48.5%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